



보도 일시	2022. 7. 29.(금) 11:00	배포 일시	2022. 7. 29.(금) 08:00
담당부서 <총괄>	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고재신 (044-215-5510)
		담당자	사무관 송윤주 (teruwith@korea.kr) 사무관 가순봉 (07mmuser@korea.kr)
<예산>	공공제도기획과	책임자	과 장 정유리 (044-215-55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재현 (z56543@korea.kr)
<자산>	재무경영과	책임자	과 장 육현수 (044-215-5630)
		담당자	사무관 권기환 (kkhpark@korea.kr)
<복리후생>	공공혁신과	책임자	과 장 오정윤 (044-215-5610)
		담당자	사무관 박준하 (joonha@korea.kr)

## 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 확정

### ◇ 공공기관 생산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

- (기능) 민간경합 기능, 비핵심 기능, 수요감소 기능 축소·조정
- (조직·인력) 2023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
- (예산) 하반기 경상경비·업추비 예산 10% 이상 절감
- (자산)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,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, 청사 활용도 제고
- (복리후생)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·정비

### ◇ 공공기관별 맞춤형 혁신계획 제출(8월말)

→ 「공공기관 혁신 T/F」 점검·조정 후 혁신계획 확정

□ 기획재정부는 '22.7.29.(금)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을 상정·의결하였음

○ 「혁신가이드라인」은 공공기관의 생산성·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, 전체 공공기관(350개)을 대상으로 함

### [추진 배경]

□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'공공기관 혁신'을 국정과제\*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

\* 국정과제 15 :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

□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·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, 수익성·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

○ 공공기관 인력은 11.5만명 증가, 부채규모는 84조원 확대

\* 공공기관 인력 : '17.5월 33.4만명 → '22.5월 44.9만명 (+11.5만명)  
공공기관 부채규모 : '16년말 499.4조원 → '21년말 583.0조원 (+83.6조원)

○ 공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고,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관도 대폭 증가

\* 공기업 영업이익(조원) : ('17)13.5 ('18)8.1 ('19)7.1 ('20)6.9 ('21)0.7  
공기업 중 이자보상배율(영업이익/이자비용) 1미만 기관수: ('17)5개 → ('21)18개

□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, 방만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,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(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)

\*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('22.6.17~24일, 한국리서치) :  
<일반국민> 방만경영이 심각하다(63.8%) /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(71.8%)  
<전문가> 방만경영이 심각하다(64.9%) /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(77.3%)

□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

- ① (생산성 제고) 민간경합·중복 등 기능조정, 과도한 조직·인력·복리후생·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, 재무건전성 확보 등
- ② (관리체계 개편)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재부 직접 경영 감독 기관을 축소하고,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
- ③ (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)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, 기술·특허 등 개방·공유,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등

□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'①생산성 제고'와 관련하여,

○ 지난 6.30일 「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」를 발표하였고,

○ 이번에 그간 전문가, 주무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\*하여 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음

\* 전문가 간담회 5회 개최, 주무부처 설명회 2회 등 개최

○ 앞으로 「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」(8월),

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(9월)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임

## [주요 내용]

□ 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### ① (기능) 민간경합·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

- ①민간경합,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→ 축소
- ②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→ 폐지 또는 축소
- ③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 → 축소
- ④기관간 유사·중복 기능 → 통폐합 또는 조정

※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, 민영화는 추진 계획 없음

### ② (조직·인력) 비대한 조직·인력 슬림화 및 '23년도 정원 감축

- 일정기간 정·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·현원차 최소화
-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, 대부서화, 지방·해외조직 효율화, 지원(기획, 인사, 경영평가)·파견인력 조정 등
- '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

\* 국정과제나 법령 제·개정 필수인력소요도 정·현원차, 인력 재배치로 자체 흡수 원칙

### ③ (예산) 인건비·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·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

- 기관별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·업추비 예산의 10% 이상 절감
  - '23년도는 경상경비 전년대비 3% 이상, 업추비 10% 이상 삭감
- 임·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\*하고,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, 수당 통·폐합 등으로 효율화
  - \* (임원) 경제상황, 기관 재무실적,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·조정(10월)
  - (직원) 기관별 임금수준,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조정(12월)
-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·공정성을 제고

#### ④ (자산)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

-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,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,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
- 고유·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, 출자회사 지분 정비
-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, 유휴공간 매각·임대, 청사·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

#### ⑤ (복리후생)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·정비

-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, 관련 규정,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항목\* 점검·조정
  - \* 사내대출, 선택적 복지비외 의료비 지원,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, 사택 관리비 등
- '자체점검 체크리스트'를 마련하여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 → 외부점검단 확인 → 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

#### [혁신가이드라인 특징]

-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,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, 생산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
-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

#### [향후 계획]

- 공공기관은 「혁신가이드라인」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,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
-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

- 기획재정부는 「공공기관 혁신 T/F」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·조정하고,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임
- 향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계획
- 아울러, 각 기관과 부처의 '혁신노력과 성과'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임

※ (별첨) 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

\*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

